

국제방송통신기구(ITU) 텔레콤과 미디어포럼(TMf) 참가 결과

-
- ◆ 기 간 : 2015. 3. 15(일) ~ 3. 21(토), 5박 7일
 - ◆ 방문국가 : 벨기에 (브뤼셀), 체코 (프라하)
-

2015. 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	---

II. 세부 활동

1. IIC TMF 포럼 참가	2
2. 벨기에 우정통신청(BIPT) 방문 및 면담	10
3. IIC 의장 면담	14
4. 포르투갈 통신규제청(ANACOM) 이사장 면담	16
5. 체코 통신위원회(CTU) 방문 및 면담	17
6. 체코 개인정보보호청(UOOU) 방문 및 면담	19
7. 체코 텔레비전방송공사(CT) 방문 및 면담	22
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ICT 분야 추진정책 동향	25
9. 출장 후속조치	34

III. 기타 참고자료

1. 이기주 상임위원 TMF 발표자료	37
2. 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중점 추진 과제 상세 내용	41
3. 출장 관련 사진자료	44
4. ICT 관련 신임 EC 집행위원과 주요 임무	50
5. EC의 ICT 분야 주요 정책 이슈 현황과 전망	54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국제방송통신기구(IIC)에서 주관하는 '텔레콤과 미디어 포럼(TMF)'에 참석하여 방송통신 분야 최신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규제 기관 간 협업 강화 모색
- 벨기에와 체코의 방송통신 분야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정책 방향 및 여론 동향 등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

2. 출장 국가 : 벨기에(브뤼셀), 체코(프라하)

3. 출장 기간 : '15년 3월 15일(일) ~ 21일(토), 5박 7일

4. 출장자

소속	성명	직급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
	윤대성	주무관
	장좌영	주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혜원	주임연구원

5. 주요 활동

- (IIC TMF) 한국의 방송통신 동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방송통신 이슈에 대해 논의
 - IIC 의장 및 주요 참가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해외 방송통신 유관 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 벨기에와 체코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및 방송사를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IIC TMF 포럼 참가

- 일시 / 장소 : '15.3.17, 3.18 09:15~18:30, BIPT 내 회의실(브뤼셀)
- 참석자 : 이기주 상임위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영국 방송통신 규제위원회(Ofcom),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CSA), 포르투갈 통신규제청(ANACOM) 등 규제기관 및 Google, Uber, Amazon 등 다국적 기업의 고위급 인사

< 국제방송통신기구(IIC) 및 TMF 개요 >

- 커뮤니케이션 전 분야*의 동향 분석 및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방송통신 분야 규제기관, 학계인사,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독립기구
 - * 인터넷, 통신, 방송, 출판 및 뉴미디어 등
- 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은 스폰서십, 회원비 등을 통해 조달*
 - * 스폰서십은 연간 12,000파운드(약 2,000만원), 정회원비는 연간 5,000파운드(약 850만원), 준회원비는 연간 1,500파운드(약 250만원)
- 설립 / 소재지 : 1967년 / 영국(런던), 지부(호주, 캐나다, 프랑스, 홍콩, 이탈리아, 싱가포르, 남아공, 태국, 영국, 미국 등 10곳)
- 회원 : 정부기관(25개), 기업회원(10개), 개인
- 텔레콤과 미디어 포럼(Telecommunications and Media Forum, 연 3회 2일간)
 - 각국의 규제기관, 학계, 기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방송통신 분야 관련 지식 및 최신 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0 주요 내용 요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영국 Ofcom, 프랑스 CSA, 포르투갈 통신 규제청(ANACOM),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등 각국의 규제기관 정책 담당자 및 Google, Microsoft 등 글로벌 기업 전략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로드밴드 구축, OTT 규제, 데이터 경제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이슈 논의
-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1일차(3.17)에 진행된 '2015: 인터넷 거버넌스 진화의 해(2015: the year of Internet Governance evolution)' 세션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적 논의(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Dialogue)'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

□ 주요 회의내용

【개회사】

- (IIC 의장) 이번 행사는 5년 임기의 새로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출범하는 시기에 개최되는 포럼으로서 의미가 더욱 특별함
- (BIPT 청장) 인터넷은 급속히 발전하여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미래에도 혁신·성장·고객만족 등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급부상 중인 IoT와 같은 신기술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현안을 발생시키면서 관련 정책의 논의가 더욱 중요해짐

【유럽의 디지털 아젠다 정책적 우선사항과 조화 및 비전】

- (Peter Linton, EIF 고문) 유럽인터넷포럼(EIF)은 EC의 디지털 아젠다 관련 보고서인 ‘The digital world in 2025: Indicators for European Action(‘09)’ 및 ‘The digital world in 2030: What Place for Europe?(‘14)’을 발간
 - 현재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디지털 기술이 과학 발전, 도시 개발, 사회 통합, 서비스 분야 등에서 지나치게 이용자 개인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임
 - 이 문제는 다양한 수요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실행가능하고(actionable)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데이터 관련 정책을 통해서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음

- 디지털 기술 환경에 있어 데이터는 일차적인 자료(primary raw materials)이며 데이터 정책에 대한 특별한 접근법이나 규제, 지침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역시 하향(downstream)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Anthony Whelan, EC 전기통신망과장)** 디지털 아젠다에 명시된 의제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중요함
 - 유럽 내의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 활동(Cross-border customers activities)의 촉진이 필요
 - 올해 5월에 EC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이 발표될 예정으로, 많은 회원국을 초대하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임
 - 디지털 분야의 발전은 유럽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정치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임
- **(Roza Thun, 유럽의회 의원)**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완전한 조화(full harmonization),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 및 대담한 개혁이 필요
 - 유럽의회는 관련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참석자분들이 유럽의회 내 작업반(지재권, 디지털아젠다, 디지털단일시장 등)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rika Mann, 페이스북 공공정책 매니저)** 유럽에는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 관련 규제가 너무 많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현재의 규제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유럽 외 지역에서 설립되는데, 유럽에서도 관련 기술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

- (이기주 위원) 한국에서는 핀테크*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보호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함
 - 핀테크 관련 유럽의 데이터 정책 및 입장은 어떠한지?
- * 핀테크(FinTech) :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클라우드 펀딩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
- (Anthony Whelan) 전자 결제 시장 관련하여 사이버 보안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지만 보안을 위한 규제가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
- (Erhun Bas, Ericsson Turkey 부사장) 미국 FCC의 망중립성 기준 발표에 대한 유럽의 입장은?
 - FCC의 결정에 대해 美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美 행정부가 바뀌면 결정의 내용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

【유럽의 브로드밴드 목표 달성방안】

- (Ramazan Demir, Turk Telekom 규제담당) 유럽 국가별로 세워놓은 브로드밴드 목표의 달성 가능성(actionable), 기회비용, 상업적 실행 가능성, 시장 구조와의 적합성 및 진행에 있어 필요한 촉매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

- 인터넷 접속 비용은 보급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며,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사회 및 경제적 발전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함
- o (Hartwig Tauber, 유럽 FTTH 위원회 국장) 시장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정 기술의 필요 여부는 시장이 결정해야 함
- o (Adrian Whitchurch, British Telecom 유럽지역 부사장) 안정적이고 경쟁을 지지하는 규제정책이 필요
- o (Michael Hattermann, 통신과 부가서비스 사업자 연합 브뤼셀 사무소장) 유럽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점점 증가 중이며, 역내 여러 국가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규모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

【OTT 규제방향】

- o (Augusto Preta, ITMedia 컨설팅 회장) 비디오 서비스는 인터넷 트래픽 폭증의 주요 원인이며 최근 신규 비디오 서비스가 증가 중
-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분야의 혁신 촉진 및 투자 증가 방안, 브로드밴드 콘텐츠에 필요한 규제 및 기존 방송 규제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 o (Theo Bertram, Google 유럽지역 정책전략팀 매니저) OTT(Over-the-top)는 정확한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OTT 관련 이슈는 더 이상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IT 대기업과 방송사 및 이통사 간의 Zero-sum game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이슈임
- o (Steve Gettings, Ofcom 국제협력과장) OTT 규제에 있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행 방송 제도만큼의 소비자 보호 장치는 필요

- (Manuel Kohnstamm, Liberty Global 정책담당) OTT는 콘텐츠 제공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한층 강화된 협력이 필요

【2015년 : 인터넷 거버넌스 진화의 해】

- (Megan Richards, EC DG CONNECT 고문) '15년에는 NTIA*의 IANA**기능 이양 결정, WSIS+10*** 등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일정이 다수 있으며,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의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

〈 참 고 〉

- *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통신정보관리청) : 미국의 통신과 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는 상무부 산하의 연방정부기관
- **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 기관) :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의 전 세계적 주소에 대하여 최종적인 조정과 관리를 하는 기관
- *** WSIS+10(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10) : '15년 UN총회(9월) 및 WSIS 고위급회의(12월)에서는 '05년 WSIS 결과물인 정보사회의 효율적인 발전과 국가 및 지역 간 정보격차해소 협력 등의 이행 경과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 (이기주 상임위원)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는 인터넷 주소 관련 이슈에서 인터넷 공공정책 전반으로 확대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
 - 인터넷 거버넌스의 논의는 개방성, 유연성,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 논의, 포괄성 등 근본적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개도국의 참여를 도모해야 함
 - 인터넷이 방송통신 전반을 아우르는 도구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IIC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적극 다룰 수 있길 바람
 -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는 특정 국가나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 문제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한국은 인터넷의 혜택 및 역기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살려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

- (Jean-Jacques Sahel, ICANN 유럽지역 부사장)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에는 ITU, ICANN외에도 IETF*, W3C** 등 많은 기구들이 있으며, ICANN은 이 가운데 하나로서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 중
- 미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권을 민간에 이양하려는 목적으로 ICANN을 설립한 것이며, IANA기능 이양은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계획

< 참 고 >

* IETF(인터넷국제표준화기구,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인터넷의 운영, 관리,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프로토콜과 구조적인 사안들을 분석하는 인터넷 표준화 작업기구로 망 설계자, 운영자, 업체, 연구자들에 의해 구성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 국제 웹 표준화 기구의 하나. WWW의 표준안 제작과 새로운 표준안 제안, 기술의 공유를 통한 WWW의 기술적, 사회적 확산을 위해 구성된 전세계적 단체로 1994년 10월에 설립

- (Oliver J. Sume, EuroISPA 회장)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의 장이 있지만 모든 주제가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 (Sally Shipman Wentworth, Internet Society 부사장) 인터넷 관련 이슈들은 상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터넷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유연한(flexible) 체계가 필요

【클라우드, M2M 및 데이터경제】

- (Stephane Ducable, AMAZON 공공정책 담당)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보안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함

- (Dirk Lybaert, Belacom 대외협력 담당) 미래의 글로벌 성장은 모바일과 데이터 경제가 주도할 것이며 유럽 디지털 분야의 성공은 디지털 인프라의 발전, 디지털 기술 활용 산업의 성장, 이용자 혜택 증가 등에 달려 있음
- (Markus Reinisch, Vodafone 공공정책과장) 인터넷 경제 발전에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입장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함
- (Jens-Henrik Jeppesen, 민주주의와 기술센터 유럽담당과장) 인터넷상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 필요함
- (Pearse O'Donohue, EC 소프트웨어·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과장) 아직도 국경 간 디지털 활동에는 신뢰가 부족하며,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을 통한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신뢰가 필수적임

벨기에 우정통신청(BIPT) 방문 및 면담

□ 일시 / 장소 : '15.3.16 10:30~11:30, BIPT* 내 회의실(브뤼셀)

* BIPT : Belgian Institute for Postal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s

□ 면담자 : 잭 하만데(Jack Hamande) 청장

< 벨기에 우정통신청(BIPT) 개요 >

○ 벨기에 전기통신 부문 및 우편시장 규제,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브뤼셀 수도권 지역* 미디어 규제 관련 사무소관의 연방정부기관

* 벨기에는 3개 공용어를 중심으로 불어 공동체, 네덜란드어 공동체 및 독일어 공동체 등 3개의 언어 공동체로 구분되며, 각 공동체별 미디어(라디오 및 TV) 규제기관 상이

○ ①전기통신 시장, ②우편 시장, ③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④라디오 및 TV방송 등 크게 4가지 분야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해 '91년 설립

※ '91년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03년 독립 행정기관으로 변형

0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대표단은 유럽의 주파수 및 OTT 관련 정책 동향, 망중립성 기준 설정, 이용자 보호 정책, 700MHz 주파수 배분,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질의
- Jack Hamande 청장은 Must-carry에서 Must-offer로 전환 중인 EU의 지상파 방송 콘텐츠 재송신 정책, 아직 EU차원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인 OTT 분야, '15년 말 EC차원에서 발표 예정인 망중립성 기준, EU차원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배분될 예정인 700MHz 주파수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유럽의 주파수 정책 동향】

- 주파수는 희소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 콘텐츠 재송신 문제에 대해 유럽 각국은 Must-carry 정책에서 Must-offer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 중

〈참고〉

- * Must-carry(의무 재송신) : Must-carry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가 공공성이 강한 방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는 것. 한국의 경우, 방송법 제78조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 제외)을 수신하여 변형 없이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해야 함을 규정
- * Must-offer(의무 제공) : Must-offer는 Must-carry와 반대로 공영 방송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의미

【OTT 관련 논의 동향】

- BEREC*에서 진행되는 ICT 정책 관련 논의 중 특히 OTT**분야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EU차원의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태

*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유럽 전기통신규제기구

** Over The Top : 개방된 인터넷에서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 EU 내에서는 OTT 대신 CAPs(Contents and Application Providers)라는 용어의 사용을 선호하며, EU차원에서 '15년 내 OTT 및 CAPs 관련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 이번 TMF 기간 동안 CAPs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ISP)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

【망중립성 기준 설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15년 말 망중립성에 대한 EU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설정이 향후 방송통신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우려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 통신 서비스의 품질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장치도 필요
 - 디지털 통신 분야의 상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규제기관은 이용자 보호 정책의 추진이 교통, 금융, 게임, 소비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700MHz 주파수 배정】

- EU차원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배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 EU가 설정한 지침에 따라 각 규제기관에서는 사업자가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해야 하지만, 이용자도 자신의 정보가 활용되는 경로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 IoT*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

*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BIPT의 TMF 주최】

- BIPT는 이번 TMF 주최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소속 직원이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를 쉽게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며 유럽의 방송통신 분야 의제 형성에 적극 참여하길 원함

IIC 의장 면담

- 일시 /장소 : '15.3.18 08:15~08:45, BIPT 내 회의실(브뤼셀)
- 참석자 : 파비오 콜라산티(Fabio Colasanti) IIC 의장 등

0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대표단은 방통위와 IIC 간 협력 방안, 아시아 지역의 IIC 참가 현황 등을 질의
- Fabio Colasanti 의장은 TMF 행사의 성격 및 방통위 개최를 제안하고, EU 지역 주최 행사에는 다소 소극적인 아시아 지역 기관들의 참가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IIC TMF 홍보】

- IIC TMF는 연 3회 개최하며, 상반기 1회는 브뤼셀, 하반기 1회는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
- IIC 주관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기관 및 기업의 고위급 인사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포럼 참가 인원을 평균 90~120명으로 제한하여 소규모로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
- 방통위가 IIC에 회원으로서 가입하고 TMF를 개최해 주기를 바램

【아시아 지역의 참가】

- IIC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3개 지부 개설

-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기관 및 기업들은 출장 경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이번과 같이 유럽 및 미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회의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참가

【아시아 지역의 참가】

- o 방통위 직원의 EC 파견근무 가능 여부에 관련해서는 EC 내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겠음

포르투갈 통신규제청(ANACOM) 이사장 면담

□ 일시 /장소 : '15.3.18 11:00~11:20(TMF 중 휴식시간), BIPT 내 회의실(브뤼셀)

□ 참석자 : 파티마 바로스(Fátima Barros) ANACOM 이사장 등

* ANACOM : Autoridade Nacional de Comunicações(Natioanal Communications Authority)

< 포르투갈 통신규제청(ANACOM) 개요 >

- 포르투갈 통신시장을 규제 및 감독하고, 국제사회에서 포르투갈 국가차원의 통신 부문을 대표하는 우편 및 전기통신 규제기구
 - * 공공기관이었던 포르투갈 통신기구(ICP)가 공공기업 자격의 ANACOM으로 재편('02.1.6)
- 주요업무
 - 방송통신 융합 등 통신 부문 전략적 가이드라인 및 정책 수립 지원
 - 신규 서비스 및 기술 도입에 앞서 공청회와 이해관계 규명 등 절차 제공, 법에 의거한 규제 마련
 - 주파수 및 번호 자원의 할당
 - 통신 부문의 경쟁법 적용에 있어 책임 당국과 협력
 - 통신 장비 및 자료의 적합성 평가, 시중 판매를 위한 요건 규정
 - 통신 부문의 분쟁 조정 및 해결

□ 주요 면담내용

【TMF 발표주제 관련 동향】

-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등 KCC-ANACOM 간의 상호 발표 주제에 관한 의견 및 양국의 규제 동향 논의

【양 기관 간 협력 방안】

- 업무상 양해각서(MoU), 정기적인 교류협력체 구성 등을 통한 양 기관 간 방송통신 분야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체코 통신위원회(CTU) 방문 및 면담

□ 일시 / 장소 : '15.3.19 10:00~11:30, CTU 내 회의실(프라하)

* CTU : Czech Telecommunication Office

□ 면담자 : 앤드류 리틀(Ondřej Malý) CTU 상임위원 등

< 체코 통신위원회(CTU) 개요 >

- CTU(Czech Telecommunication Office)는 전기통신법에 근거하여 설립됨('05. 5월)
 - 동 전기통신법에 명시된 전기통신 및 우정사업 분야에 대한 시장 규제, 산업 진흥 등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중앙행정기관(프라하에 위치)
- 5명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교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추천하여 임명(5년 임기)
 - 위원회는 법제, 재난대응, 소비자보호, 정책(통신, 주파수 등), 국제협력 등 11개과로 구성
- 주요업무
 - 통신 사업권 인허가, 주파수 관리 등 일반적인 통신관련 분야 관할
 -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 식별, 방송심의, 망이용료 관련 조항 운영
 - 통신 분야 관련 가격 정책 결정 및 시행
 - 방송 규제 등 관련 법 운영에 따른 분쟁 조정
 - 라디오 주파수 관련 행정적 운영 및 방해 주파수 조사 등
 - 우정사업 관리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 규제, 심의 등 집행

0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대표단은 CTU의 주파수 정책 추진 기준, 데이터 트래픽 관리 등을 질의
- Ondřej Malý 상임위원은 EU의 기준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파수 관리 정책, 데이터 트래픽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체코 디지털 목표'와 주파수 경매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주파수 정책 추진 기준】

- CTU의 담당업무 대부분은 EU차원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체코가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본 기관과 타 EU국가들이 추진하는 방송통신 분야 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
 - 단, 체코는 자율적으로 국내의 주파수 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EU, CEPT* 등 지역기구 및 ITU, NATO 등 국제기구의 지침에 적합한 주파수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려 함

* CEPT : Conference of European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
유럽 우편 전기 통신 주관청 회의

- 경매를 통해 주파수 대역을 배정받은 사업자들은 매년 주파수 사용료 (spectrum fee)를 납부해야함
 - 이는 사업자들이 주파수 확보 이후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해놓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며, 주파수 사용료는 유럽 평균 수준

【데이터 트래픽 관리】

- 현재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심화에 따른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해 EU의 정책 기조에 적합한 정책 추진 중
 - EU에서는 브로드 밴드 확장을 위해 1,200MHz 주파수 대역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각국은 '15년까지 해당 주파수 대역 확보가 필요
 - 체코는 동 목표 달성 내용이 반영된 '체코 디지털 목표'를 설정

※ 체코는 '14년 800/1,800/2,600MHz 대역폭 경매 완료, 현재 3.6~3.8GHz 대역폭 경매를 준비 중으로 경매 조건에 대한 논의 진행 중

체코 개인정보보호청(UOOU) 방문 및 면담

□ 일시 / 장소 : '15.3.18 14:00~16:00, UOOU 내 회의실(프라하)

* UOOU : Úřad pro ochranu osobních údajů(The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 면담자 : 이고르 네멕(Igor Němec) 청장, 조지 메리골드(Jiří Měsíček)
대외관계국장 등

< 개인정보보호청(UOOU) 개요 >

o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률상의 의무 준수 여부 감독, 정보 처리 작업 등록 관리, 법률 위반 관련 시민사회 의견 및 요청사항 처리,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제공 등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 개인정보보호법('00.4.4)에 근거하여 설립('00.6.1)

o 주요업무

-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 준수 여부 감독, 개인정보 처리 기록 관리
- 위법 시 보상안(incentives) 및 항의 수락, 합의 경과 통지
- 진행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기타 권한 행사
- 법규에 따른 경범죄 및 기타 행정의무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상담(consultation) 제공
- 해외 유관기관, EU기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기구와 협력

o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대표단은 체코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조기에 확립된 비결, 개인정보 유출 유형 및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질의
- Igor Němec 청장은 정치 체제 변화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미친 영향, 개인정보 유출로 정부기관에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 등을 설명

□ 주요 면담내용

【UOOU와 CTU 간 기관 통합】

- 현재 체코에서는 ICT 부문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CTU와 UOOU 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정부 내에 전자통신, 사이버, 정보보호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UOOU가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을 총괄

【개인정보보호 체계 조기 확립】

- 체코는 ICT 분야 관련 법률('92년), 개인정보보호법('00년)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UOOU를 설립하였는데 이와 같이 다른 국가에 비해 이른 시기에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89년 이후 기존 사회주의 체제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때까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
- '80년도경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만든 것에도 영향을 받음

【개인정보 유출 유형】

- 체코에서도 피싱(phishing)과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스미싱(smishing)의 경우 드문 사례임

【개인정보 유출 대응】

-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UOOU가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 사건에 해당하면 사법기관이 조사를 진행
 - UOOU는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도 감독하며 대표적 사례로 보건정책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노동사회부에 큰 액수의 범칙금을 부과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해서 EU와 체코는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규제에 애로사항이 많음
 - Google, Microsoft 등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 간 개인정보 융합에 따른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생성 우려
 - 단,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분야는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측되므로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체코 텔레비전방송공사(CT) 방문 및 면담

□ 일시 /장소 : '15.3.20 10:00~11:30, 체코 텔레비전방송공사(CT, 프라하)

* CT : Česká televize, Czech Television

□ 참석자 : 안드레아 베라노바(Andrea Beranova) 대외관계국장 등

< 체코 텔레비전방송공사(CT) 개요 >

- CT(Česká televize, 英文 : Czech Television)는 체코의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로, '92년 체코 텔레비전 법에 의거하여 설립, 현재 총 6개 채널* 운영 중
 - * ČT1(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등), ČT2(다큐멘터리, 해외영화 등), ČT24(24시간 상영 뉴스 등), ČT Sport(스포츠), ČT :D(어린이 교육) 및 ČT art(문화, 공연 등)
 - ※ 前身 체코슬로바키아 텔레비전 방송공사('53.5.1 개국)
- (사장) Petr Dvořák, 6년 임기로 CT이사회(the Czech Television Council)에서 임명
- (감독기구) 체코 하원에서 임명된 이사 15명으로 구성된 CT이사회
 - ※ 위원회 중 1/3은 2년 임기, 나머지는 6년 임기로 활동
- (조직규모) 총 2,962명('13.12.31 기준)
- (하부조직) 체코 텔레비전 프라하, Brn 텔레비전 스튜디오, 오스트라바 텔레비전 스튜디오 등
- (주수입원) 텔레비전 라이선스 등록비(1개월 약 5.40유로) 및 광고료

0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대표단은 CT의 재정 구조와 시청료 징수 방안,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료, 700MHz 주파수 배정, 아리랑TV 및 KBS WORLD-CT 간 방송 분야 협력 등을 질의
- Andrea Beranova 대외관계국장은 광고수익보다 수신료의 비율이 높은 CT의 재정 구조, TV 및 라디오 수신기 대수마다 부과하고 있는 수신료 징수 체계,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700MHz 주파수 배정 방안, 한국 방송국와의 적극적 협력을 바라는 CT의 입장 등을 설명

□ 주요내용

【CT의 재정 구조】

- CT가 소유한 6개 채널 중 CT-2와 CT-Sports 채널만 광고가 가능하며 총 재정 중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는 91%, 광고 수익은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광고수익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으며 모두가 펀드로 귀속됨

【시청료 징수 방안】

- 현재 CT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시청료 징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체코에서는 각 세대가 보유한 TV 및 라디오 수신기 개수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약 20년 전에 제정되었고 수신기 현황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수신료가 투명하게 징수되고 있지 않음
- 투명한 수신료 징수 방안은 방송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지상파 재송신료 논의】

- 현재 체코는 Must-carry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에 재송신료 분쟁이 없음

【700MHz 주파수 배정】

- CTU(체코 통신위원회)는 700MHz 주파수 배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며, 결과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이동통신 분야에 배정하기로 결정
 - 그러나 체코의 산업통상부는 700MHz 주파수를 방송 분야에 배정하기를 원하여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의견이 갈림
 - 700MHz 주파수가 이동통신 분야에 배정되면 TV 채널들의 현재 번호도 변경되어 프로그램 시청에 큰 불편이 발생할 것

【한-체코 간 방송 협력】

- 약 2년 전에 한국의 EBS가 CT를 방문하여 양 방송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CT는 2달 전에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방문하여 양국의 UHD 방송 추진 동향을 공유
- (아리랑TV 및 KBS WORLD와의 협력) 방통위 대표단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아리랑TV 및 KBS WORLD 채널의 특성을 설명하고,
 -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체코인들의 한국 문화 이해 증진 등을 이유로 CT가 한국의 방송사와 협력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으며 상호 간의 프로그램 교류 등을 제안
 - CT측은 한국의 아리랑TV, KBS WORLD측과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양국의 방송 분야 교류가 점차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ICT 분야 추진정책 동향

□ 개 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의 신경제 전략인 유럽 2020전략 (Europe 2020 Strategy)의 ICT 분야 중점사항으로 7대 디지털 아젠다 (Digital Agenda) 및 의제별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
 - (7대 아젠다) ①디지털 단일시장(주요 목표), ②상호호환성 및 표준, ③신뢰성 및 보안, ④초고속 인터넷 접근, ⑤연구 및 혁신, ⑥디지털 역량배양 및 ⑦EU 공동체에 대한 ICT의 기여 등
- '14년 10월 출범한 신규 EC의 융커 집행위 위원장은 임기 중 추진 예정인 10대 중점 정책 분야에 '디지털 단일 시장' 포함
 - 집행위 내 디지털 단일시장 달성을 위한 부의장(Andrus Ansip) 및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과제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Günther Oettinger) 선임

□ 최근 정책 동향

- 집행위 관계자들은 '15년 5월 발표예정인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위한 첫 회의를 소집, 3가지 주요 추진 분야 설정('15.3.25)
- (1) 디지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접근성 개선
 -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촉진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택배서비스를 위한 EU내 소비자 및 계약규칙 조화 추진

- 지역 간 서비스 차단 문제 해결, 창작자와 서비스 이용자 이해관계 균형을 위한 저작권법 현대화 및 부가가치세 처리방식의 단순화

(2)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인터넷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현행 이동통신 및 미디어 규칙 검토
- EU 회원국 간 주파수 조정 및 관리 문제 개선
-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앱 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간 신뢰도 및 신속한 불법 콘텐츠 제거 강화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보호 규제 도입 촉진

(3)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럽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창출

- 산업 부문 전반의 신규 기술 통합 및 스마트 산업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원(Industry 4.0)
- 신규 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 추진
- 유럽 산업 및 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용 극대화 촉진 및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보호 및 표준 관련 문제 해결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성화에 있어 올바른 프레임워크 개발
- 유럽 시민들의 전자정부, e-보건 등 상호운용적 e-서비스 혜택 확대 및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

□ 새로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출범과 주요 임무

- (신규 집행위원회 출범) 1명의 위원장(Jean-Claude Juncker), 7명의 부위원장, 20명의 집행위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2014~2019)¹⁾

〈 참 고 〉

- 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 역할을 수행. 집행위원(Commissioner)는 28개 회원국가에서 선출되나, 출신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 전체 이익을 대변
- ② 집행위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며 전 세계 139개의 대표단이 주재
- ③ 집행위원회 직원은 약 23,000여명으로 34개 총국(DG, Directorate General)과 11개 서비스(Service)에서 근무²⁾

○ 집행위원회의 주요 임무

- 법안제안(의회 채택 및 이사회 승인 절차)
- 유럽연합 법령 집행
- 연간 작업 프로그램과 일정에 따라 목표 설정 및 우선순위 선정
- 유럽연합 정책과 예산 관리 및 집행
-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다른 국가, 기구와 협상 진행

1) http://ec.europa.eu/about/index_en.htm
http://www.euractiv.com/files/commissioners_112014-en-v7.png
2) http://ec.europa.eu/about/ds_en.htm

신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 및 개별 임무³⁾

직위	성명	주요 임무	국적 및 주요 이력
의장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회 정책, 기능, 역할 등 총괄 조정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디지털 단일 시장 등 주요 정책 아젠다 총괄 조정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총리, 재무장관 역임
부위원장	Frans Timmermans	·규제개선, EU 내부 기관 관계 조정 등	네덜란드 네덜란드 국회의원 역임
	Federica Mogherini	·외교 및 안보 대표	이탈리아 이탈리아 국회의원 역임
	Kristalina Georgieva	·예산 및 인적 자원 관리	불가리아 월드뱅크 부총재 역임
	Andrus Ansip	·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달성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총리 역임
	Maroš Šefčovič	·에너지 담당	슬로바키아 교육 분야 집행위원 역임
	Valdis Dombrovskis	·유로존, 노동 시장 정책 관리	라트비아 라트비아 총리 역임
	Jyrki Katainen	·일자리, 경제성장, 투자 및 경쟁 관리	핀란드 핀란드 총리 역임
집행위원	Günther Oettinger	·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과제 추진	독일 에너지 분야 집행위원 역임
	Johannes Hahn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 정책	오스트리아 지역정책 집행위원 역임
	Cecilia Malmström	·유럽연합 무역 정책	스웨덴 내무 집행위원 역임
	Neven Mimica	·국제 협력 및 개발	크로아티아 소비자 정책 집행위원 역임
	Miguel Arias Cañete	·기후 및 에너지	스페인 유럽의회 의원
	Karmenu Vella	·환경 및 해양 수산	몰타 몰타 관광 및 항공부 장관 역임

3) <http://ec.europa.eu/commission/201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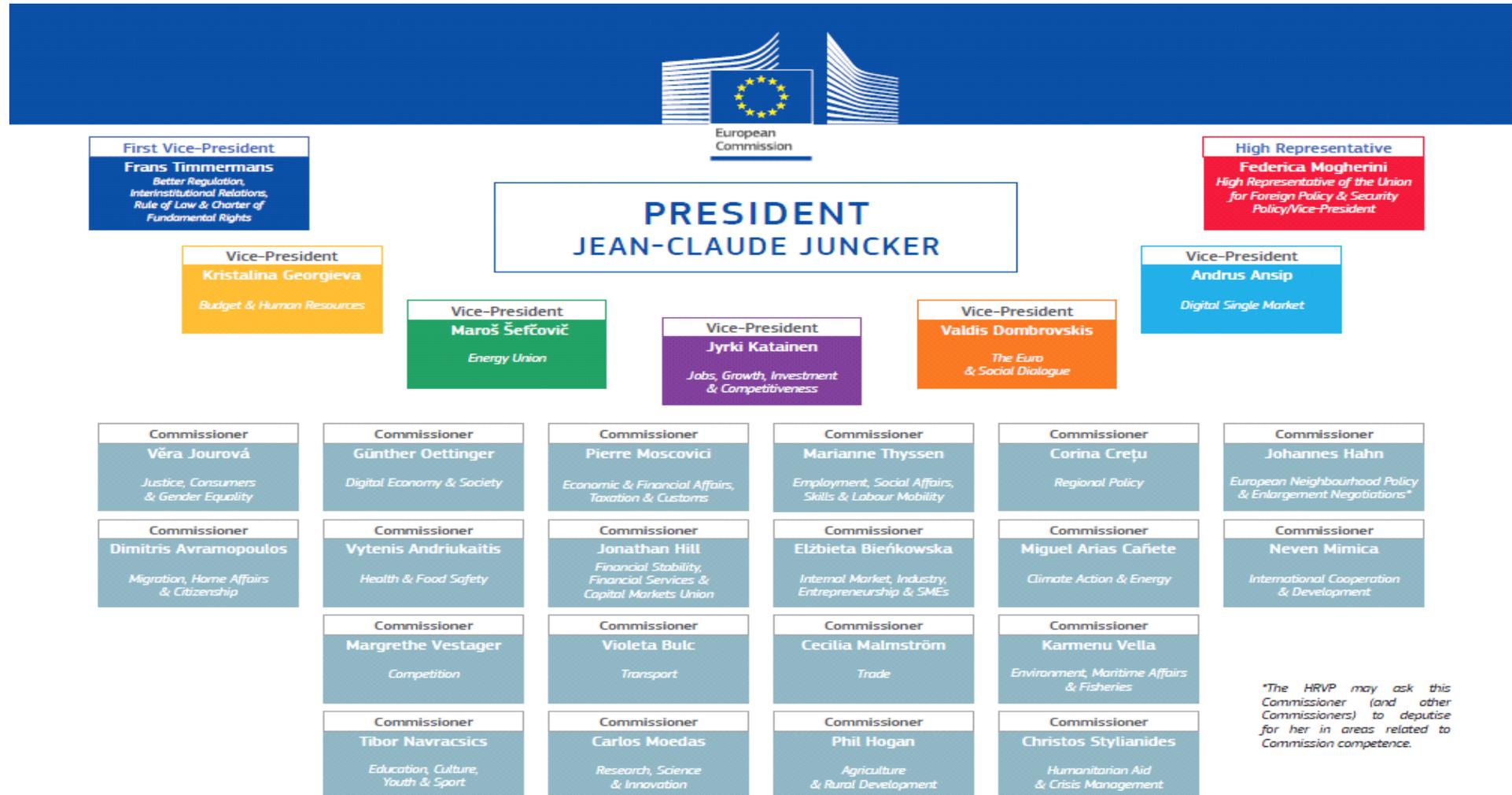
Vytenis Andriukaitis	·보건 및 식품 안전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보건부 장관 역임
Dimitris Avramopoulos	·이민 및 시민권	그리스 그리스 국방부, 외무부 장관 역임
Marianne Thyssen	·고용, 사회, 직업기술, 노동 시장	벨기에 플레미시 기독교민주당 당수 역임
Pierre Moscovici	·경제 및 재정, 조세 및 관세	프랑스 프랑스 경제 및 재무부 장관 역임
Christos Stylianides	·인도적 지원 및 위기 관리	사이프러스 유럽의회 의원 역임
Phil Hogan	·농업, 지방 지역 개발	아일랜드 아일랜드 환경부 장관 역임
Jonathan Hill	·재정 안정, 재정 서비스 및 금융시장	영국 영국 상원 의장 역임
Violeta Bulc	·운송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개발전략부 장관 역임
Elżbieta Bieńkowska	·내부 시장, 산업, 기업가 및 중소기업	폴란드 폴란드 기반개발 부총리 역임
Věra Jourová	·사법, 소비자 보호 및 양성 평등	체코 체코 지역개발부 장관 역임
Tibor Navracsics	·교육, 문화, 스포츠	헝가리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 역임
Corina Crețu	·지역 정책	루마니아 유럽의회 부의장 역임
Margrethe Vestager	·경쟁 정책	덴마크 유럽의회 의원 역임
Carlos Moedas	·연구개발, 과학 및 혁신	포르투갈 포르투갈 국회의원 역임

□ 용커 집행위 체제 10대 중점 정책 분야 및 목표⁴⁾

- 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투자 촉진
- ②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 ③ 새로운 에너지 정책 추진
- ④ 산업기반 강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 ⑤ 공정한 경제 및 재정 통합 추진
- ⑥ 미국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자유 무역 추진
- ⑦ 상호 신뢰에 기반한 사법과 기본권 강화
- ⑧ 이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 추진
- ⑨ 보다 강력한 글로벌 행위자
- ⑩ 민주적인 변화 촉진

4) http://ec.europa.eu/about/juncker-commission/docs/pg_en.pdf

<붙임> 신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구조



□ 유럽집행위 통신 네트워크 · 콘텐츠 · 기술 총국(DG CONN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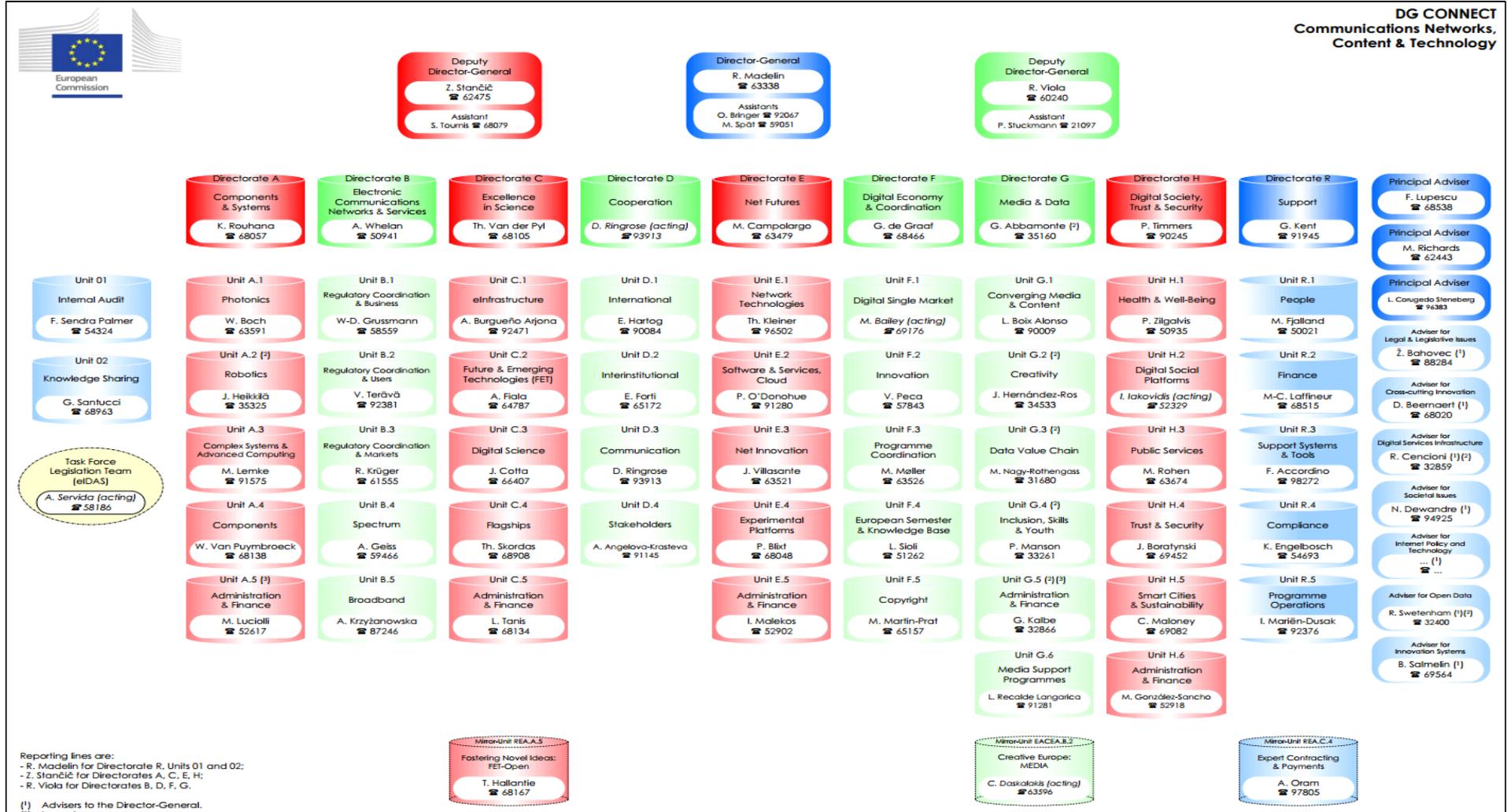
※ Directorate General for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 & Technology

- (목적) 인류 진보, 공평성 확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등 디지털 시대의 EU가 직면한 과제 달성 촉진
 - 양질의 ICT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 ‘연결된 디지털 단일시장’ 이용 도모 및 접근성 확대
 -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개발 및 온라인 권리, 자유 보호
 - EU 시민들에게 개방된 인터넷 초고속 이용 보장
 - 유럽의 문화, 창조 및 시청각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표현 및 정보의 자유, 미디어 다원성 및 자유 지지
 - EU 회원국 및 EC내 디지털 정부 및 공공서비스 확산
- (주요 추진전략) Europe 2020 및 EU 디지털 아젠다
 - 유럽집행위 ‘디지털 단일시장’ 소관 부의장(Vice-President) Andrus Ansip 및 ‘디지털경제 및 사회과제 추진’ 소관 집행위원(Commissioner) Günther Oettinger의 프로젝트 팀 업무 협력 및 지원
- (조직구성) 총국장 1인, 부총국장 2인, 9개 국(directorate), 46개 부서(unit), 최고 고문(Principal Adviser) 3인 및 세부이슈별 자문위원 7인

□ 총국장 소개

 <p>Robert Madelin (’57년생, 영국)</p>	○ 학력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 ~ ’79 옥스퍼드 대학교 - ’83 ~ ’84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 현 통신네트워크 · 콘텐츠 · 기술 총국장 - ’10 ~ ’12 EC 정보사회미디어총국장 - ’04 ~ ’10 EC 보건소비자총국장 - ’97 ~ ’03 EC 통상총국 국제경제관계과장 - ’93 ~ ’97 EC 부의장(Sir Leon Brittan)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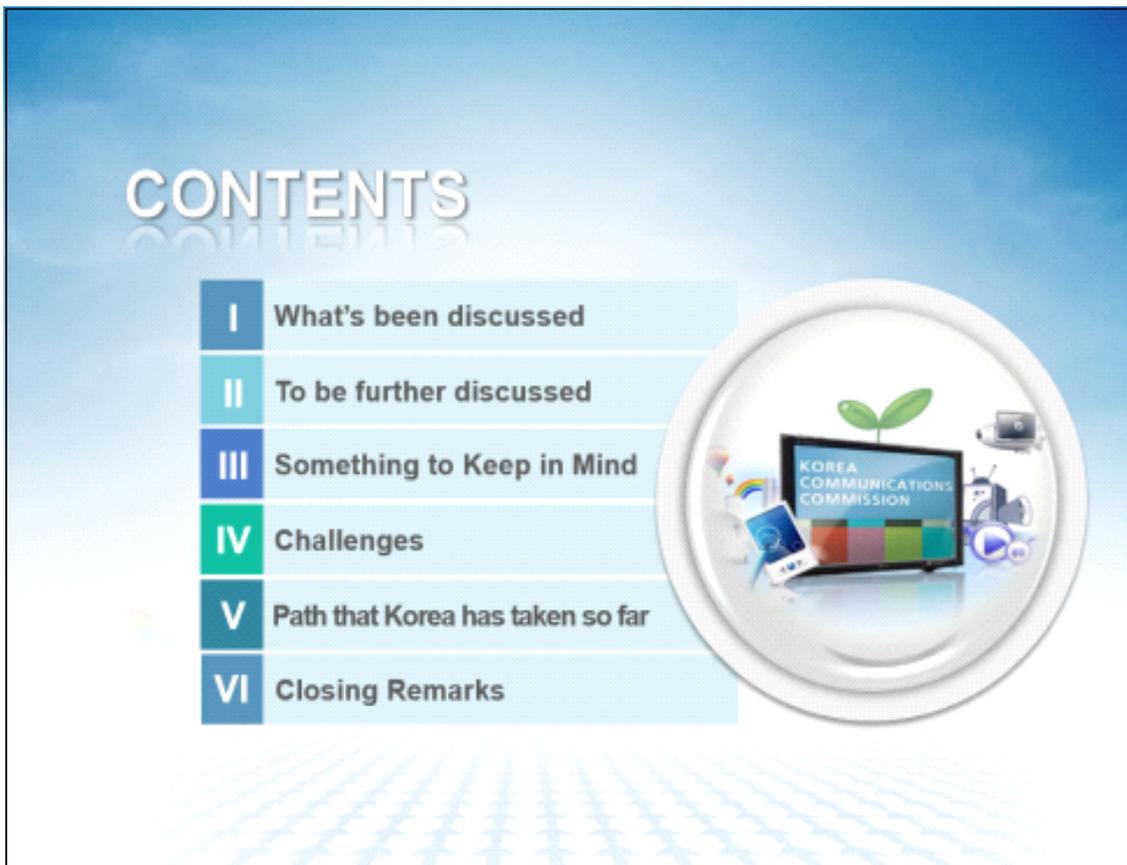
<붙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신·네트워크·기술 총국(DG CONNECT) 구조 및 업무



출장 후속조치

-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적 최신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위해, 방통위의 IIC 회원 자격 회복 및 관련 행사 한국 개최 추진
 - '16년 IIC 정회원 가입을 위한 예산(연간 약 850만원) 편성 가능 여부 타진
 - 미래부의 '14년도 기재부 심사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사례를 참고하여 방통위의 회원 가입 필요성을 뒷받침할 논리 마련
 - TMF 한국 개최를 위한 적정 예산 산출 및 관련 예산 '16년도 편성 추진
- 이번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소통 채널 구축에 공감한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 벨기에 우정통신청(BIPT), 포르투갈 통신규제청(ANACOM), 체코 통신위원회(CTU), 개인정보보호청(UOOU), 체코TV 등 방문기관과의 실무적 협의 및 정보 공유 채널 구축, 업무상 양해각서(MoU) 체결
- EU의 IT 정책 및 규제 동향 분석 및 교류 강화
 - Digital Single Market 전략 및 시사점 분석
 -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의 동향 분석 체계화를 통해 국내 정책 수립 및 제도 도입 시 EU 사례를 적극 활용
 - 유럽집행위 통신·네트워크·기술총국(EC DG CONNECT)와의 정책 교류 확대

< 별첨 1 - 이기주 상임위원 TMF 발표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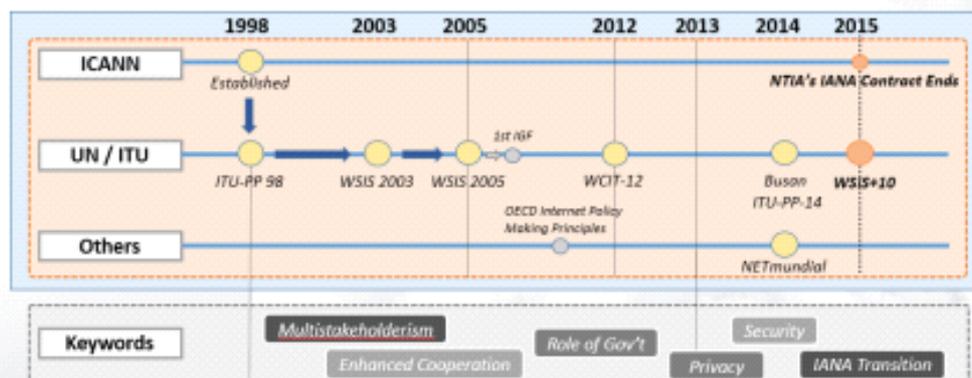


What's been discussed

- Definition of Internet Governanc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by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their respective roles, of shared principles, norms, rules,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programmes that shape the evolution and use of the Internet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2003)

- Development of Discussion



①

To be further discussed

- Key events and meetings

IANA Stewardship Transition Process

- Possible transition deadline extension

NTIA contract ends in Sept 2015
but 6-months delay in transition expected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 Renewal of mandate for IGF to be decided in UN General Assemb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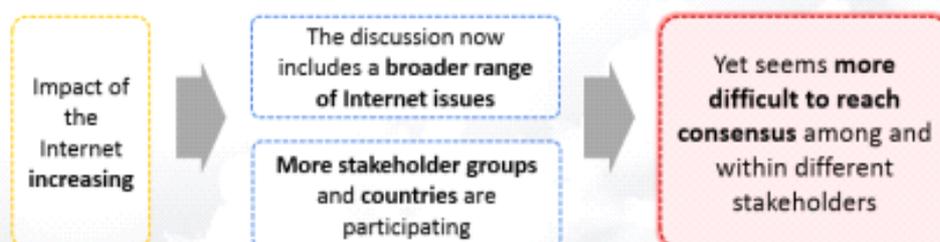
WSIS+10

- Review an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WSIS Outcomes

- June to Dec 2015 : Intergovernmental Preparatory Process
- Dec 2015 : WSIS High-level Meeting of UNGA

Sept 2015,
New York

- Prospects



②

Path that Korea has taken so far

- The Internet has almost become a life commodity
 - 7 of 10 Koreans answered they are **willing to give up newspapers before forgoing mobile Internet access**
- A number of experiences in dealing with **negative consequences of cyberspace development**

In 2014

(January) 85 million personal data leaked from 3 major credit card companies
(March) 12 million personal data leaked from Korea Telecom(KT)
(December) Korea Hydro & Nuclear Power under cyber-attack

- Participated in efforts to **sustain Internet-driven innovation and growth**
 - Various Internet governance dialogues such as **NETmundial**, ICANN meetings, Internet Governance Forum, etc.
 - **Multistakeholder-based**, local Internet governance platform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KIGA)*”

⑤

Closing Remarks

IIC as another platform to discuss Internet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is a global issue that can't be solved by a particular country or a stakeholder group

Korea will continue to engage in the Internet governance dialogue at the local and international levels

⑥

<별첨 2 - 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중점 추진 과제 상세 내용>

□ 용커 집행위 체제 10대 중점 정책 분야 및 목표⁵⁾

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투자 촉진

-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 계획안 도출
- 향후 3년 간 3천억 유로(약 42조원)에 달하는 공공, 민간 추가 투자 재원 확보
- 브로드밴드, 에너지 네트워크, 운송 인프라, 교육, 연구 및 혁신 등에 투자 확대
- 2016년 말 일자리, 경제성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현황 검토
- 기업가 정신 고양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올바른 규제 환경 조성

②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 국가별 상이한 정보통신, 저작권, 데이터 보호, 주파수 관리 관련 법령의 조화
- EU 회원국가 간 이동통신 로밍 요금 폐지

5) http://ec.europa.eu/about/juncker-commission/docs/pg_en.pdf

- 5년 임기 내 2천5백억 유로(약 35조원)의 추가적인 관련 시장 가치 창출
- 임기 시작 6개월 이내 디지털 단일시장 달성을 위한 관련 법령 추진

③ 새로운 에너지 정책 추진

- 새로운 유럽 에너지 연합(New European Energy Union) 구축을 통해 지나치게 대외 의존적인 에너지 수급환경을 개선
-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처의 신속한 변경
- 에너지 효율성 제고

④ 산업기반 강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 현재 16%에 머물고 있는 유럽연합의 자동차, 우주항공, 화학 및 의료 분야 산업 기반 GDP 수준을 2020년에 20%까지 상향
- 신기술 투자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교육을 통한 숙련된 노동자 확보 추진
- 유럽연합 내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 탈세, 자금세탁 등 세금 관련 범죄 예방과 대응을 통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⑤ 공정한 경제 및 재정 통합 추진

- 임기 내 유럽의 경제 및 재정 통합을 위한 단일 통화 안정성 보장
-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를 통한 개혁 프로그램 점검

⑥ 미국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자유 무역 추진

- 유럽의 안전, 보건, 사회 및 데이터 보안을 전제로 미국과 상호 수혜 및 투명성에 입각한 두 국가와 지역 간 자유무역 증진
- 유럽의 식품 안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확고한 조치 강구

⑦ 상호 신뢰에 기반한 사법과 기본권 강화

- 유럽 공동의 문화적 가치에 기반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및 기본권 보호
- 미국과 세이프 하버 재협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보호 조치 강화
-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와 테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⑧ 이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 추진

- 합법적인 이민에 대한 새로운 유럽정책 마련
- 불법적인 납치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공통 유럽 정책 마련

⑨ 보다 강력한 글로벌 행위자

- 보다 강력한 유럽의 위상을 위한 새로운 유럽연합 외교, 국방, 안보 정책 수립

⑩ 민주적인 변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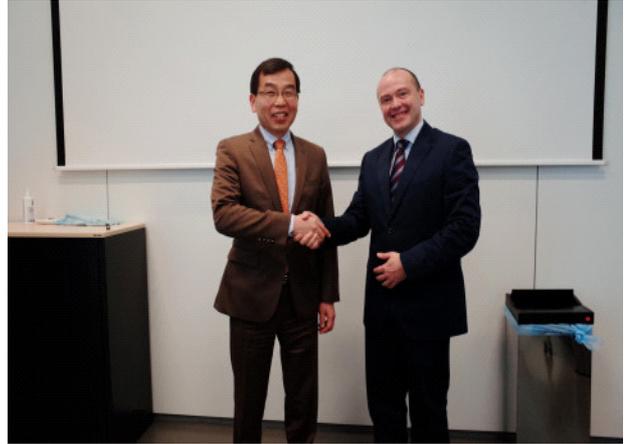
- 유럽의회, 이사회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한 집행력 제고

< 별첨 3 - 출장 관련 사진자료 >

【 벨기에 우정통신청(BIPT) 방문 및 면담 】



<양국 방송정책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면담 후 기념촬영 - I >



<면담 후 기념촬영 - II >

【 IIC TMF 행사 사진 】



<IIC의장 개회사>



<참석자 간 토론>



<이기주 상임위원 발제 - I >



<이기주 상임위원 발제 - II >

【 방통위-IIC 간 면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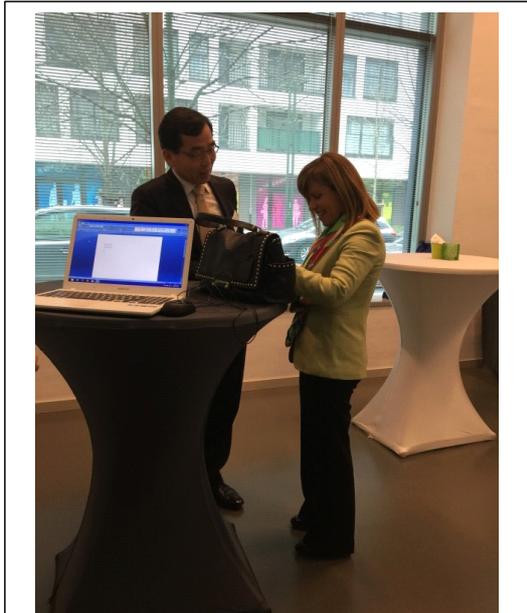


<방통위-IIC 간 협력 방안 논의>



<면담 후 기념 촬영>

【 방통위-ANACOM 간 면담 】



<방통위-ANACOM 간 협력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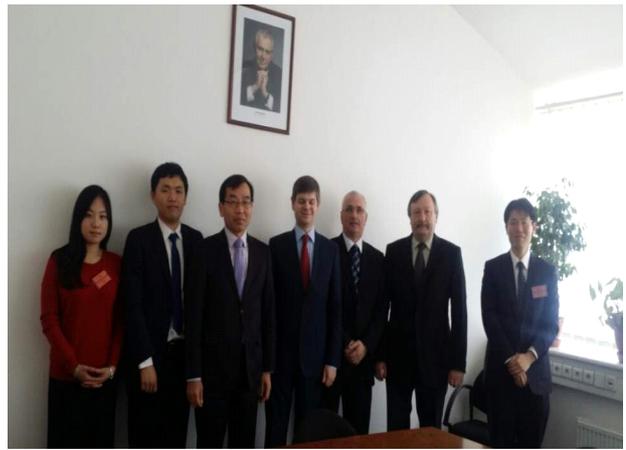


<면담 후 기념 촬영>

【 체코 통신위원회(CTU) 방문 및 면담 】



<양국 방송정책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면담 후 기념촬영 - I >



<면담 후 기념촬영 - 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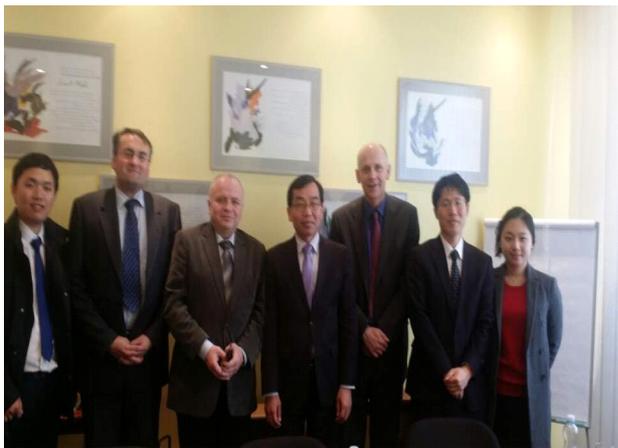
【 체코 개인정보보호청(UOOU) 방문 및 면담 】



<양국 개인정보 정책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면담 후 기념촬영 - I >



<면담 후 기념촬영 - II >

【 체코 텔레비전방송공사(CT) 방문 및 면담 】



<CT 전경>



<양국 방송정책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시설 견학>



<면담 후 기념촬영>

< 별첨 4 - ICT 관련 신임 EC 집행위원과 주요 임무 >

□ Andrus Ansip : 부위원장,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담당

○ 주요 역할 및 임무⁶⁾

-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유럽연합의 추진 과제 팀 리더
-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단일시장 추진 및 ICT 분야 유럽의 세계 선도역량 배양
- 국가별 정보통신, 저작권, 데이터보호, 주파수 관리 등 규제 장벽 해소
- 사이버범죄 대응을 비롯, 유럽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 온라인 쇼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관련 규제 간소화
-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공공, 민간 분야 추가 투자재원 확보
- 국가 및 유럽연합 정부에 대한 디지털, 전자정부 접근 촉진
- 유럽의 문화 및 창조 산업 개발 지원

○ 용커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⁷⁾

-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업무 총괄 조정 및 추진
- 디지털 경제 및 사회, 내부 시장, 산업,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 고용, 사회, 직업 기술 및 노동력 이동성, 사법, 소비자 및 양성 평등, 경제 및 재정, 세금 및 관세, 지역 정책, 농어촌 도서 발전 등 다른 분야 집행위원과의 협력 선도 및 촉진

6) http://ec.europa.eu/commission/2014-2019/ansip_en

7) http://ec.europa.eu/commission/sites/cwt/files/commissioner_mission_letters/ansip_en.pdf

- 정보통신분야에서 유럽의 선도적 위치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장벽 해소(지역 내 정보통신 규제, 저작권 및 데이터 보호, 주파수 규제 장벽 해소 등)
- 유럽시장 내 디지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동일한 데이터 보호 및 소비자 대책 적용
- 신규 창조 산업 발전 및 부흥 지원

o 집중 업무 추진 계획

- 디지털 단일 시장 완성을 위해 집행위원회에 산재된 상이한 규제 권한을 통합 조정
-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법령 작업(유럽연합 단일 시장 달성, 디지털 혁명에 맞춘 저작권 현대화, 온라인 거래를 위한 소비자 관련 규정 단순화 등)을 시작하고 총괄 조정할 것
- 취임 후 6개월 내 미국과 맺은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세이프 하버)에 대한 검토하고, 유럽의 데이터 보호 대책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
- 일자리, 경제성장, 투자 및 경쟁 부문 부위원장이 첫 3개월 내 일자리, 경제성장, 투자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⁸⁾
-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받고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누리는 자유와 보호를 온라인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프레임워크 구축을 조정할 것

8) 동 계획에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창조산업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의 문화 자산이 새로운 지역과 대상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Günther Oettinger : 디지털 경제 및 사회(Digital Economy & Society) 담당

○ 주요 역할과 임무⁹⁾

- 국가별 정보통신, 저작권, 데이터 보호, 주파수 관리 등 규제의 통합을 통한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법제정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정보통신 규제 개혁의 지속과 유럽 연합 전역의 주파수 관리에 대한 동일한 접근방법 개발
- 저작권 현대화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단 개발
- 고품질의 디지털 기반 구축 지원

○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요 임무¹⁰⁾

- Andrus Ansip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부위원장과 일자리, 경제성장, 투자 및 경쟁 담당 부위원장과 협력하여 관련 업무 지원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회 확대 및 상이한 국가별 규제 통합
-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법령 작업 추진계획을 제시할 것

9) http://ec.europa.eu/commission/2014-2019/oettinger_en

10) http://ec.europa.eu/commission/sites/cwt/files/commissioner_mission_letters/oettinger_en.pdf

- 프로젝트 팀 리더로서 관련 분야 부의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및 투자확대 계획에 기여할 것
- 창조적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유럽의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디지털 연구개발 활동을 유럽의 혁신적인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이 유럽에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디지털 단일 시장 담당 부위원장과 함께 유럽이 선도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할 것
- 디지털 단일 시장 담당 부위원장, 사법 담당 집행위원을 지원하여 데이터보호 규정을 2015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

< 별첨 5 -EC의 ICT 분야 주요 정책 이슈 현황과 전망 >

-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 브로드밴드 기반 확충, ICT 교육 확대, 디지털 저작권 강화 등 -

□ 브로드밴드 기반 확충

- 2012년 현재 유럽연합에서 910만 가구가 아직도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며, 지방의 90% 이상도 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 아울러 12%에 해당하는 지방 지역 가정만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¹¹⁾
- 이에 집행위는 다양한 브로드밴드 이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브로드밴드 투자 가이드¹²⁾를 발표
 - 집행위는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 지역 자치구 등에서 장기적인 초고속 인터넷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는 투자 가이드를 개발하여 발표
 - 가이드는 브로드밴드를 개발할 때 투자 대체 순위 목록, 계획 수립 시 공공 기관이 고려해야 할 장기 투자 방향, 자원 조달 모델,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방안, 브로드밴드 투자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
 - 同 가이드는 공공 기관이 브로드밴드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11)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newsroom/cf/dae/document.cfm?action=display&doc_id=6908

12)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news/broadband-investment-guide>

- 아울러 집행위는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지역에 더욱 빠른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커넥티드 커뮤니티 (Connected Communities)' 계획을 추진¹³⁾
 - 집행위는 이를 위해 월드뱅크, 유럽투자은행, 유럽구조투자펀드 (ESIF,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을 통한 지원과 국가보조 규칙 제정 등을 추진
- 집행위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디지털 아젠다의 목표로서 유럽연합의 모든 가정이 2020년까지 30Mbps의 속도로 브로드밴드를 이용하고, 50%의 가정이 100Mbps 속도 이상으로 브로드밴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
- 집행위는 브로드밴드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계획 추진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지식기반의 비즈니스와 인력을 양성하고,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

□ ICT 교육 확대

- 집행위원회는 ICT에 대한 교육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숙련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고, 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줄임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¹⁴⁾에 따르면, 컴퓨터 게임과 가상 환경이 향후 3년 간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 됨에 따라 클라우드와 태블릿 이용이 1년 안에 유럽의 많은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13)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819_en.htm

14) <https://ec.europa.eu/jrc/en/publication/eur-scientific-and-technical-research-reports/horizon-report-europe-2014-schools-edition>

- 아울러 2019년까지 이러한 기술 도입을 통해 학교에서 개인화된 학습을 진작시키고 가상과 원격 학습을 위한 시설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o 최근 유럽연합은 학생들의 컴퓨터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유럽 차원의 계획 중 하나로서 '코드 주간(10.13~17)'을 실시
 - 학생들에게 디지털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미래 디지털 경제 달성과 숙련된 ICT 전문 인력의 노동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
 - 코드에 대한 EU의 관심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7개 회원국에서 코딩을 교과 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5개 국가에서는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또한 코딩은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팀 협력활동, 창의력 등과 같은 능력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 보다 빠르게 관련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컴퓨터 과학, ICT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만성적인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참 고 〉

- ① EU에서 코딩 교육을 국가 정규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킨 국가는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 7개국이며,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등 4개국
- ② 독일은 일부 주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을 도입하였고, 에스토니아 일부 학교에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6살 때부터 실시
- ③ 유럽 전역에서 코드 주간에 1500건이 넘는 다양한 관련 행사가 개최됨
- ④ EC는 앱 경제(app economy)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유럽연합에서 앱 개발자가 2013년 1백만 명에서 2019년 2백 6십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지원 인력은 2018년경에 4백 8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집행위는 코드 주간 등과 같은 ICT 교육 확대 계획을 선도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 IT 업계와 관련 단체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코드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인식제고와 모범사례 전파에 동참

< 참 고 >

- ① 페이스북, MS, Rovio, 구글, SAP, Oracle, Liberty Global 등과 같은 대규모 IT 기업과 European Schoolnet과 Grand Coalition for Digital Jobs이 관련 활동을 지원
- ② European Schoolnet : 유럽 30개국 교육 장관 네트워크

- 아울러 집행위는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한 大 연합(Grand Coalition for Digital Jobs) 계획을 추진할 예정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강화

- 집행위는 유럽의 건전한 저작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성을 제기¹⁵⁾
 -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은 많은 시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법률을 어기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과학자들이 자원의 부족이나 법률적 배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
 - 인터넷을 통해 예술가들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폭넓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디지털 저작물의 공유와 확산, 판매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아울러 유럽의 저작권 체계가 국가별로 상이하여 이해관계자가 그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15) <http://www.v3.co.uk/v3-uk/news/2353544/eu-calls-for-radical-copyright-reform-in-light-of-internets-disruption>

- 집행위는 유럽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강화를 위해 구글 등 온라인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에 대한 제한¹⁶⁾을 추진
 - 신임 디지털 집행위원인 군터 외팅거(Günther Oettinger)는 온라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제시
 - 그는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지적재산을 활용한다면, 유럽연합은 이러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
 - 외팅거의 이러한 입장은 구글이 유럽에서 자신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反 경제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집행위의 압력에 이은 것
 - * 구글은 유럽의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의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구글이 유럽에서 검색시장을 독점하며 그들의 위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구글은 그간 집행위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한 바 있지만, 외팅거는 검색엔진을 둘러싼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유럽의 '통일된 규칙(uniform rules)'를 주장하고 있음
 - 집행위는 구글의 검색 사업과 광고 사업 독점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이와는 별개로 구글의 모바일 운영 시스템인 안드로이드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구글이 검색시장 뿐만 아니라 운전자 없는 자동차, 광통신 인터넷 등과 같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구글을 유럽 대륙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
- 유럽에서 저작권은 매우 뜨거운 이슈로, 집행위는 향후 지역 내 인터넷 경제의 번영과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

16) <http://www.v3.co.uk/v3-uk/news/2379130/europes-digital-commissioner-has-google-in-his-crosshairs>

-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범죄 대응 -

□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¹⁷⁾)

- 신규 유럽연합 집행위는 우선순위 아젠다로 데이터 보호¹⁸⁾를 상정하고, 이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의 흐름과 클라우드 컴퓨팅, 강력한 검색 엔진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오,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이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14. 5월에 있었던 유럽 선거로 인해 지체되어 있음
- 현재의 관련 법률은 1995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당시 인터넷은 현재에 비해 약 1%의 데이터만을 유통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임
- 유럽연합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은 2012년 1월에 제안되었고, 2014년 3월 유럽 선거 직전 유럽의회에서 채택됨
- 법안은 유럽의 단일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상이한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고, 모든 회원국을 포괄하는 단일 감독기구를 설립하며, 데이터 보호 법률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를 시행¹⁹⁾토록 하고 있음

17)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에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리킨다.

18) <http://www.euractiv.com/sections/innovation-enterprise/data-protection-tops-commissions-agenda-309674>

19) 동의 없이 유럽연합 밖으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업은 1억 유로의 벌금 혹은 전 세계 수익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유럽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의 행정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요청할 때 사전에 해당 회원국가의 데이터 보호 규제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집행위는 同 법률안이 각료이사회를 통과하면 2015년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
- o 집행위는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미국과 맺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보호 조약²⁰⁾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집행위는 미국 NSA의 前 계약직원인 스노우든이 폭로한 대규모 도청 사건 이후 기업의 데이터 보호와 보안 취약점 감소를 위해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을 세이프 하버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
- 집행위 용커 위원장 또한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명목으로 유럽인들의 안전과 건강, 데이터 보호 표준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 o 디지털 단일 시장 분야 부위원장인 안두러스 안십(Andrus Ansip)은 지난 유럽의회 청문회 당시 데이터 보호를 최고 우선순위의 활동 목표로 설명하고 데이터 보호 지침의 신속한 실행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o 집행위는 빅데이터가 경제, 자연과학, 그리고 환경 등과 같은 분야에 막대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믿지만, 관건은 빅데이터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시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
- o 한편 지난 5월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음

20) 유럽의 법률에서는 유럽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를 다른 국가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세이프 하버”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유럽연합이 규정하는 법률만큼 유럽연합 시민들의 정보를 보호한다면 미국 기업이 유럽연합 시민들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同 판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구글을 비롯한 대규모 온라인 기업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사이버보안 수준 제고 및 사이버범죄 대응

- 유럽정보보호원(ENISA)이 2013년 발표한 사이버보안 위협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웹 기반 공격은 2012년에 비해 거의 1/4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데이터 유출 사고 건수는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²¹⁾
 - 상위 8건의 데이터 침해사고는 모두 수천 만 건의 데이터 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5억 5천 2백만 명의 신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사이버 범죄로 산업계가 입은 연간 피해액은 2012년 3천억 달러(약 330조 원)에서 2013년 1조 달러(약 1,100조 원)로 추산
 - 또한 1억 명에 이르는 개인이 신원절도(ID Theft)에 의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
- 이에 최근 유럽연합은 사상 최대 사이버보안 훈련 실시한 바 있음
 - 유럽 29개 국가에서 200여 개 이상의 기관과 400명 이상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보안 훈련(Cyber Europe 2014)을 실시
 - * 참여국가 :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 자유무역 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아이슬란드 공화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 연방, 리히텐슈타인 공국) 등

21)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1227_en.htm

- 사이버유럽 2014 대응 훈련은 사이버위기를 해결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을 제고하고, 공공과 민간, 그리고 민간과 민간 사이의 다양하고 수평적인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o 또한 유로폴의 사이버범죄 대응센터(EC3, European Cybercrime Centre)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사이버 범죄 대응 TF(J-CAT, Joint Cybercrime Action Taskforce)를 창설함²²⁾
- o 향후 유럽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포함한 국가기관, 기업, 개인의 사이버보안과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인 유럽정보보호원, 유로폴 등과 함께 보다 강력한 공조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
- 혁신적인 기술 개발 진작과 활용 확대 : 연구개발 지원확대, 사물인터넷과 5G 등 -

□ ICT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

- o 유럽연합은 전체적으로 ICT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일본과 미국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 ICT 분야에 대한 전체 정부 투자는 6.6%이지만, 일본은 9.1%, 그리고 미국은 7.9%인 것으로 나타남
- o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ICT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투자를 연간 110억 유로(약 13조원)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²²⁾ <http://www.v3.co.uk/v3-uk/news/2362720/europol-launches-all-star-anti-hacker-j-cat-taskforce>

- 아울러 향후 7년 동안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계획인 H2020(Horizon 2020)을 통해 ICT 분야에 130억 유로(약 1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 참 고 >

- ① 2012년도에 ICT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많았던 상위 국가는 독일 12억 달러(약 1조원), 영국은 6억 9천만 유로(약 8천억 원), 스페인은 6억 유로(약 7천억 원), 그리고 스웨덴은 5억 5천만 유로(약 6.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
- ② H2020의 ICT 분야 2014~2015 연구과제는 새로운 컴포넌트 및 시스템(A new generation of components and systems), 첨단 컴퓨팅(Advanced Computing), 미래 인터넷(Future Internet) 등 38개로 구성

□ 사물인터넷(IoT) 연구개발 및 육성 정책 추진

- 유럽연합은 제7차 연구개발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을 통해 2008년부터 사물인터넷 연구 프로젝트 'CASGRAS(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 Global RFID-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zation)'를 진행
 - 해당 프로젝트는 사물인터넷의 발전 방향 및 서비스 모델 정립을 위한 기반 연구를 주요 골자로 하며 약 53만 3천유로(약 6억 원)가 투입
 - 2010년 EU는 'CASGRAS'의 후속으로 사물인터넷 관련 40여 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92만 5천유로(약 11억 원)가 투입되는 'CASGRAS II'를 실시
- 2009년 EU는 사물인터넷의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액션 플랜(Internet of Things: A14-point Action Plan)을 발표
 -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신규 비즈니스 영역 개발 등을 위한 거버넌스 정의, 개인정보 보호, 위험 요소 규명 등 사물인터넷 관련 사안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제시

- 2013년 8월에 범유럽 차원의 사물인터넷 발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²³⁾
 - 2005년부터 EU는 집행위를 주축으로 혁신을 통한 사회적 파급력 유도 및 고용 창출이라는 범유럽 차원의 정책 목표에 사물인터넷의 발전 방향이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
 - 그 일환으로 집행위는 2010년부터 각종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왔으며, 2012년에는 사물인터넷의 정책적 규제 프레임에 관한 대중 의견 수렴 활동을 전개
 - 연구 활동의 결과물로서 집행위는 '사물인터넷의 발전 지원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유럽의 정책 대안(Europe's policy options for a dynamic and trustworth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을 공개
 - 해당 결과물에서 현재 사물인터넷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옵션²⁴⁾을 제시
- 집행위는 현재 H2020 중 IoT 분야 사업공고(Internet of Things and Platforms for Connected Smart Objects²⁵⁾)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 환경 구현과 관련된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향후 집행위는 경쟁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사물의 지능화 및 자율화에 따른 인간의 의사결정권 제한 가능성을 막고, 사이버공격 증가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23) European Commission, "Europe's policy options for adynamic and trustworth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2013.9.8

24) 사업자들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시장 규제방법을 결정하고, 유럽연합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물인터넷 산업발전 유도가 가능한 연성법(Soft Law) 추진

25) <https://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top/en/opportunities/h2020/topics/9091-ict-30-2015.html>

□ 5G 선점을 위한 정책 추진

- 5G는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
 - 즉, 범위와 용량이 거의 무한대인 시스템에서 사물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의 흐름이 매우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정의
- 유럽 의회는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 모바일 단일시장 활성화를 EU2020 프로젝트(유럽 경제 활성화 전략 프로젝트)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
 - 통신시장이 하나로 연결되면 생산성의 증가로 경제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연결을 가능케 하여 사회를 통합할 것이라 주장
- 집행위는 2020년까지 5G 기술 연구를 위해 5천만 유로(약 6백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 부문과 민간 ICT 부문에서 70억 유로(약 8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5G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²⁶⁾
 - 아울러 규제 중심의 인위적 경쟁촉진 정책이 아닌 시장 자율화, 투자 우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이를 통해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70억 대의 핸드셋에 5G가 도입되어 사용될 것으로 전망

26)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14/11/141104091050.htm>